

- 내년도 예산안에서 법무부와 대통령경호처의 특수활동비만 각각 8억, 7억 증액되었습니다. 대민 업무로 사용되는 관서업무추진비도 국방부, 경찰청, 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법무부 순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특정업무경비가 증액된 상위 5개 부처는 경찰청, 법무부, 대통령경호처, 고용노동부, 국토부입니다. 권력기관 중심으로 특활비, 업추비, 특경비 등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고위공무원은 월급인상분을 반납하여 어려운 재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모범을 보여 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24년 예산안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고위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증가율로 임금 인상됩니다. 최소한 대통령을 비롯한 정무직 공무원이 인상분을 반납하는 술선수범이 있어야 윤석열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중요시여기고 국민을 위한다는 진정성이 느껴질 텐데,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국가공무원 처우개선율 및 인상분 반납〉

연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안
처우개선율(%)	3.8	3.0	3.5	2.6	1.8	2.8	0.9	1.4	1.7	2.5	3.0
인상분반납	없음	없음	정무직	고공단 이상					4급 이상	없음	없음

□ 윤석열 정부는 초부자감세는 추진하고 권력기관 예산과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무원 월급 인상은 알뜰하게 챙기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재난안전 예산, 대한민국 역사를 지키는 예산은 축소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교육에 대한 중앙정부의 투자도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 이태원 2주기 뿐만 아니라 올해 초 있었던 부천호텔 화재 사건을 떠올려 보아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투자는 결코 소홀히 하였으면 안 됩니다. 재난안전예산은 2022년 21.9조원에서 2024년 25.1조원까지 증가해왔고 행정안전부는 보도자료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예산안에 26.1조원 반영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년도 예산안에서 재난안전예산은 24.5조원 반영되어 행정안전부가 요구한 26.1조원에 한참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지난해 25.1조원 보다 줄어든 규모입니다.

* 재난안전예산(조원) : (22) 21.9 → (23) 23.6 → (24) 25.1 → (25요구안) 26.1 → (25안) 24.5

- 부천호텔화재 사건과 같이 스프링클러는 화재 초기진압과 대피를 위해 매우 중요한 시설임에도 설치가 되지 않은 대형건축물이 아직도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하여 이를 해결하려는 사업이 있는데 내년에 종료됩니다. 문제는 정부가 파악하기에 362동 건축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데 예산은 정작 이중 145동만 지원가능한 19억 3천 3백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부천호텔 화재사건이 발생한 지 몇 달 안 되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재난안전 대비에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예산 투자가 적극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 25년 사업종료, 362동 지원 필요한데 145동 지원 예산 1,933백만원 반영

- 대한민국 국민의 역사를 지키는 예산도 줄어들었습니다. 일본 역사왜곡 대응 연구 예산은 14억 3천 6백만원에서 12억 2천 8백만원으로 약 2억원 줄어 들었고, 독도 주권 수호 및 해양 연구 예산도 4억 5천 8백만원에서 2억 7천 5백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 일본 역사왜곡 대응 연구 : (24) 1,436 → (25안) 1,228백만원
독도 주권 수호 및 해양 연구 : (24) 458 → (25안) 275백만원

- 대한민국 국민의 미래를 위한 교육에 대한 국비 투자도 줄어드는 사업이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국비로 지원해왔던 고교무상교육 지원, 초중고 예술강사 인건비 지원,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인건비 지원 사업 모두를 중단하고, 앞으로는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교육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려는 의미로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 또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사업 중 반영되지 않고 있는 사업이 확인되어,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추진하겠다는 사업들이 공수포로 끝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새만금 농생명용지 용수 공급은 지난 7월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 발언으로 언급되어 전북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실제로는 일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광주~영암 아투토반,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등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예산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 민주당, 2025년 정부예산안 심사 방향

(1) 초부자감세 저지, 권력기간 예산 등 불요불급한 사업·부실 설계된 사업 예산 대폭 감액

- 복지, 안보 등 갈수록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수입 기반이 탄탄하여야 합니다. 민주당은 상속세율 인하 등 초부자감세는 저지하고, 정부가 법으로 폐지하려는 부담금에 대해서도 재검토하여 재정수입을 확충하도록 할 것입니다.
- 그리고 법무부,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업추추진비,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하고 그 외 부처는 50% 이상 감액하고 위법한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경비도 전액 삭감하는 한편,
- 정부가 정보를 숨기고 있어 정말 유전이 있는지 국민적 의혹만 키우고 있는 유전개발사업 출자(500억), 실제 집행이 잘 안되고 있고 정부가 부실하게 설계한 마음건강사업(복지부 507억, 과기부 50억) 사업도 적극 감액할 것입니다.
-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식용종식 폐업·전업 사업은 지원의 사각지대가 너무나 커서 향후 유기전이 대폭 늘어나거나 한동안 대규모의 불법도축이 이루어지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말로는 개식용을 막겠다고 해놓고 심각한 문제가 있도록 개식용종식 폐업·전업 사업을 설계한 윤석열 정부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 이 외에도 지난해 4.6조원 중에서 3조원 넘게 불용시켰는데 내년엔 4.8조원이나 편성한 예비비를 비롯하여 과다편성된 사업, 수원국이 준비도 되어 있지 않거나 분쟁국가인데도 편성하여 불용될 것이 명확한 ODA 사업 등도 대폭 감액 조정할 것입니다.

(2) 국민과 경제를 살리는 6대 민생·미래 예산 증액 추진

- 재정수입은 확충하고 문제사업은 감액하는 한편, 민주당은 국민과 경제를 살리는 6대 민생·미래 예산 증액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첫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을 반영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행정안전부 조차 2024년 초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조기집행하겠다고 하면서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지역경제가 빠르게 회복” 하기 위함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고물가 시기에 가계에 큰 보탬이 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의 매출 증진에도 기여하는 만큼 이 사업예산이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둘째,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이 계속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줄여서는 안 되는 투자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교육에 대해 적극 투자하는 기조를 유지하도록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예산을 증액시키는 한편, 초중고 예술문화강사,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인건비 국비 지원도 지속되도록 하겠습니다.
- **셋째, 국민안전과 직결된 재난안전 예산을 증액시키겠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재난안전 투자는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과 같이 재난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에 대해 증액되도록 하겠습니다.
- **넷째, RE100에 대응하여 에너지고속도로에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예산을 증액**시키겠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가기관 전력망 설비 확충에 투자하는 한편 RE100 이행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 **다섯째,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일환으로 육아부담을 대폭 낮추어 드리도록 하기 위해 아동수당 확대와 우리아이 자립펀드 등 예산이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여섯째,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성장을 위해 AI지원, 극소수국가에서 독점하다 시피하고 있는 AI반도체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고용과 근간을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 민주당은 오늘 밝힌 6대 민생·미래 예산과 더불어 왜곡된 역사 대응, 소상공인 및 자영업, 농어업, 문화·체육, 취약계층, 군장병 장교 등 국민에게 필요한 사업예산도 증액되도록 할 것입니다.

2024. 11. 4.

더불어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허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

<별첨1> 2025년 예산안 부처별 특수활동비(안보목적 특활비 제외)

(단위 : 백만원, %)

	24년본예산 (A)	25년정부안 (B)	증감 (B-A)	증감율 (B/A)
합계	35,166	36,630	1,464	4%
[01]대비실	8,251	8,251	0	0%
[02]경호처	7,605	8,255	650	9%
[03]국회	980	980	0	0%
[08]감사원	1,519	1,519	0	0%
[10]국조실	652	652	0	0%
[14]외교부	521	521	0	0%
[16]법무부	7,209	8,009	800	11%
[33]공수처	111	111	0	0%
[42]국세청	2,712	2,712	0	0%
[43]관세청	329	329	0	0%
[50]경찰청	5,209	5,223	14	0%
[60]해경청	69	69	0	0%

<별첨2> 2025년 예산안 부처별 관서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24년본예산 (A)	25년정부안 (B)	증감 (B-A)	증감율 (B/A)
총합계	107,333	115,774	8,442	8%
[17]국방부	43,761	45,600	1,840	4%
[50]경찰청	7,919	8,983	1,064	13%
[02]경호처	2,105	2,672	567	27%
[01]대비실	6,709	7,129	419	6%
[16]법무부	2,687	3,048	360	13%
[23]복지부	1,756	2,116	360	20%
[11]기재부	2,582	2,893	311	12%
[46]우주청	0	274	274	순증
[60]해경청	1,118	1,333	215	19%
[10]국조실	946	1,130	184	19%
[27]국토부	1,638	1,820	182	11%
[22]산업부	1,495	1,676	182	12%
[03]국회	950	1,115	166	17%
[43]관세청	1,305	1,470	165	13%
[14]외교부	1,752	1,911	159	9%
[12]교육부	912	1,046	134	15%
[42]국세청	1,996	2,125	129	6%
[13]과기부	1,740	1,867	127	7%
[24]환경부	626	748	122	19%

	24년본예산 (A)	25년정부안 (B)	증감 (B-A)	증감율 (B/A)
[29]중기부	1,715	1,835	120	7%
[20]문체부	950	1,052	102	11%
[19]보훈부	412	513	101	25%
[55]특허청	438	537	99	23%
[21]농림부	890	986	96	11%
[49]방사청	420	513	93	22%
[38]금융위	1,066	1,158	92	9%
[53]농진청	309	399	90	29%
[04]대법원	4,000	4,081	80	2%
[44]조달청	505	579	75	15%
[52]국가유산청	375	442	67	18%
[28]해수부	996	1,062	67	7%
[32]식약처	392	453	61	16%
[05]헌재	584	645	61	10%
[30]인사처	552	613	61	11%
[56]질병청	301	348	47	16%
[18]행안부	2,067	2,113	47	2%
[39]권익위	368	403	35	10%
[15]통일부	636	670	35	5%
[54]산림청	628	660	32	5%
[47]재외동포청	109	141	31	28%
[31]법제처	149	179	30	20%
[25]고용부	1,465	1,492	27	2%
[36]방통위	379	405	26	7%
[58]행복청	170	194	25	14%
[57]기상청	273	290	17	6%
[51]소방청	266	282	16	6%
[26]여가부	285	300	16	5%
[41]개보위	319	334	15	5%
[37]공정위	381	396	15	4%
[40]원안위	191	203	12	7%
[59]새만금청	165	177	12	7%
[34]인권위	185	196	11	6%
[45]통계청	594	604	11	2%
[33]공수처	154	164	10	7%
[62]진화위	104	109	5	5%
[48]병무청	218	222	4	2%
[07]민주평통	37	39	2	5%
[35]국교위	40	38	-2	-5%
[61]5·18진상위	63	0	-63	-100%
[08]감사원	1,140	1,077	-63	-6%
[06]선관위	1,046	914	-132	-13%

<별첨3> 2025년 예산안 부처별 특정업무경비

(단위 : 백만원, %)

	24년본예산 (A)	25년정부안 (B)	증감 (B-A)	증감율 (B/A)
총합계	905,926	912,220	6,294	1%
[50]경찰청	642,527	648,113	5,586	1%
[16]법무부	57,559	59,376	1,818	3%
[02]경호처	2,515	2,858	343	14%
[25]고용부	9,652	9,877	225	2%
[27]국토부	193	401	208	107%
[08]감사원	4,418	4,556	138	3%
[51]소방청	2,574	2,651	77	3%
[34]인권위	336	395	59	18%
[38]금융위	208	258	50	24%
[46]우주청	0	40	40	순증
[36]방통위	81	120	39	48%
[01]대비실	1,580	1,610	30	2%
[48]병무청	67	91	24	36%
[55]특허청	239	261	22	9%
[11]기재부	1,729	1,750	21	1%
[10]국조실	477	488	11	2%
[06]선관위	1,157	1,166	9	1%
[12]교육부	58	65	7	12%
[05]헌재	794	800	6	1%
[23]복지부	49	53	4	8%
[07]민주평통	22	25	3	14%
[41]개보위	53	56	3	6%
[59]새만금청	14	14	1	6%
[44]조달청	1,070	1,070	1	0%
[03]국회	18,536	18,536	0	0%
[13]과기부	378	378	0	0%
[14]외교부	16	16	0	0%
[15]통일부	18	18	0	0%
[19]보훈부	19	19	0	0%
[20]문체부	92	92	0	0%
[22]산업부	72	72	0	0%
[24]환경부	190	190	0	0%
[28]해수부	270	270	0	0%
[29]중기부	26	26	0	0%
[30]인사처	71	71	0	0%
[31]법제처	10	10	0	0%
[32]식약처	387	387	0	0%
[35]국교위	7	7	0	0%

	24년본예산 (A)	25년정부안 (B)	증감 (B-A)	증감율 (B/A)
[37]공정위	1,194	1,194	0	0%
[45]통계청	3,712	3,712	0	0%
[47]재외동포청	7	7	0	0%
[52]국가유산청	24	24	0	0%
[53]농진청	26	26	0	0%
[54]산림청	372	372	0	0%
[56]질병청	17	17	0	0%
[57]기상청	19	19	0	0%
[58]행복청	10	10	0	0%
[62]진화위	200	200	0	0%
[18]행안부	716	715	-1	0%
[40]원안위	76	75	-1	-2%
[26]여가부	65	60	-5	-8%
[49]방사청	173	167	-6	-3%
[21]농림부	1,521	1,511	-10	-1%
[33]공수처	441	418	-23	-5%
[39]권익위	582	551	-32	-5%
[61]5·18진상위	78	0	-78	-100%
[43]관세청	13,669	13,548	-122	-1%
[42]국세청	50,767	50,640	-127	0%
[04]대법원	20,053	19,697	-356	-2%
[17]국방부	6,256	5,900	-356	-6%
[60]해경청	58,482	57,170	-1,312	-2%